

# 민주,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강행...통합 "독재 선전포고"

### 김태년 "잘못된 관행 효과가 국민명령" 주호영 "일방적 국회 운영...국론 분열" 반쪽 개원 부담...대통령 시정연설 공전

더불어민주당은 4일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래통합당은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일(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은 관행을 혁파하라고 명령했다"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야 한다"며 "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정을 망칠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장 나쁜 줄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 없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에 의한 개원이 되고 나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라든지,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늘 총선에서 177석을 준 국민들의 민심을 이야기한다. 민심을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하루 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입기 시작 전부터 한 달가량 이어져 왔다. 21대 총선에서 177석의 '절대 과반'을 얻은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명분으로 범정 시한에 맞춘 개원을 추진했지만, 통합당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원 구성 완료 후 개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이후 첫 입시회의 의원의 임기 개시 7일 뒤에 소집하게 돼 있으며, 이는 오는 5일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지난 2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과 총 188명이 서명한 입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과거에는 범정 시한에 맞춰 입시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지는 않은 채 여야가 협상을 계속해 원구성이 타결된 이후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곤 했다.

여야 이견은 주요 상임위원 국회 법제사범위·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몫을 둔 힘겨투기가 핵심이다. 특히 법안 통과와 '마지막 관문'이자 '상원' 노릇을 해 온 법사위원장 몫을 서로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합의 불발시 표결에 따라 18개 전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시나리오까지 앞서 나온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5일 본회의는 제10야당이 불참하는 '빈쪽짜리'



국회 도착한 추경안 자료

4일 오전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자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이를 옮기고 있다.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이날 본회의는 21대 초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통합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불투명해진다. 현재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박병석·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으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렇게 통합당이 빠진 채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통합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어, 민주당이 현재 생각하는 '선 개원 후 협상' 수순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공식 회동 외에도 지난달 30일, 지난 2일 비공식 회동을 통해 입장차를 점차 좁혀 왔다. 이날 오후

에도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여야 협상 난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시정연설 일정도 공전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문 대통령의 개원 시정연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단독 개원으로 야당이 불참할 경우 대통령의 시정연설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지지율 58.9%...2주 연속 하락

부정 35.5%...총선 이후 긍정·부정 격차 가장 좁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60%를 밑돌았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t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6월1주차(취임 16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 주간집계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p) 내린 58.9%로 조사됐다.

'매우 잘함'은 37.0%, '잘하는 편'은 21.9%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2%p 오른 35.5%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은

20.9%, '잘못하는 편'은 14.6%다. 모름·무응답은 0.9%p 오른 5.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전주 6주 만에 60% 아래로 떨어진 59.9%를 기록했으며, 이번주까지 2주 연속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3.4%p로, 총선 이후 가장 좁은 차이다. 다만 긍정평가는 11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일간 지표상으로는 지난달 29일 긍정평가 57.4%(부정평가 38.0%)로 마감한 이후 1일 56.8%(38.4%), 2일

57.9%(36.2%), 3일 58.6%(34.7%)의 흐름을 보였다.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대구·경북(49.4%→44.5%), 부산·울산·경남(54.2%→49.7%)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75.9%→82.2%)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59.7%→48.5%)에서 하락했으며, 70대 이상(52.5%→59.0%)에서 올랐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38.4%→33.6%)과 정의당 지지층(77.4%→72.9%)에서 하락했으며, 열린민주당 지지층(87.5%→94.2%)에서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8.3%→55.2%)에서 하락했다.

김윤호 기자

## 전남도 교육지원 대상에 학교도 포함

도의회 임종기 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교육지원 대상을 현행 '각급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국제경쟁력 제고, 우수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별 목적과 조건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 사업이 종료되고 지원금을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지원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도록 신설했다.

임종기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며 "전남도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